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23년 10월 28일

「B」책형

지방직 7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1. 지방직 7급의 행정학 합격선은 90점 이상으로 무난하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7급 문제인 만큼 문항별 선지들이 길어서 시험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들과 출제포인트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수 여부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책형 6번 문제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내용은 이번 시험에서 처음 다뤄진 주제였습니다. 다만 처음 등장한 주제인 만큼 문제 자체에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했다면(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쉽지않습니다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출제되어 정답률 자체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인만큼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강의에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직 7급 문제인 만큼 지방행정파트가 3문제가 구체적 운영제도(주민참여, 분쟁조정, 지방재정)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직 7급 응시자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만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1 문항별 정답률

번호	정답률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1	83.1	2.9	6.3	83.1	7.7
2	84.8	3.5	6.5	84.8	5.2
3	89	89	4	3.3	3.7
4	83.2	5	8.5	3.3	83.2
5	81.3	81.3	2.5	7.3	8.9
6	78.2	2.1	8.1	11.6	78.2
7	78.4	78.4	11.6	7.1	2.9
8	75.1	6.6	9.6	8.7	75.1
9	62.6	11.8	17.1	62.6	8.5
10	69	12.9	69	3.3	14.8

번호	정답률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11	82.9	82.9	1.7	4.4	11
12	77.8	11	2.5	8.7	77.8
13	75	17.1	4.2	3.7	75
14	75.1	4.6	75.1	14.8	5.4
15	75.9	5.4	75.9	8.1	10.6
16	58.2	19.8	7.7	58.2	14.3
17	92.1	3.3	92.1	3.3	1.3
18	84.6	5.6	84.6	2.5	7.3
19	67.8	9.2	17.7	67.8	5.2
20	64.2	9.6	64.2	10	16.2

*매가공무원 풀서비스 23년 10월 28일 오후 14:30 기준

2 출제영역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5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3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 ④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직위분류제

- ①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직무중심으로 하여,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대상으로 한다.
- ②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equal pay for equal work)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다.(높은 보수형평성)
- ③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는 것은 계급제**이다.
- ④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되므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재(private goods)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 ②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 ③ 요금제(toll goods)는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 ④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출제영역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특징

- ① 시장재(private goods)중 의료, 교육과 같은 재화의 경우 경합적으로 시장을 통한 배급이 가능하지만, 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어려워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공유지의 비극).
- ③ 요금제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이다. **요금제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X-비효율성 x)으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집합재(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나 서비스 혜택으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고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SUMMARY 공공서비스의 유형(Savas)

유형	특징	정부개입의 원인 및 방식	예
공공재 (집합재)	비배제성, 비경합성	무임승차 등으로 시장형성 X → 정부의 직접공급	• 국방, 외교, 치안 등 순수공공재
공유재	비배제성, 경합성	무임승차, 과잉소비 → 합리적 이용규칙(제도)의 설정	•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녹지
요금제	배제성, 비경합성	자연독점 →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공급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시장재	배제성, 경합성	공공부문 개입의 최소화 →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	• 노인돌보미, 보육 등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공익의 실제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③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행정의 가치

- ① 가외성은 행정에 있어서 중첩이나 여분·초과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공익의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공익의 실제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는 행정을 의미한다.
- ④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라는 격언과 “지체하는 자는 진다”라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모순성이 많다.

- ① 윌슨(Wilson)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했다.
- ②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③ 굿노(Goodnow)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
- ④ 사이먼(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사이먼(Simon)의 행정행태론

- ④ 제시문은 사이먼(H. A. Simon)의 행정행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사이먼은 행정관리론의 대표적 원리인 분업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등에 대해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함을 논박하고, 행정학 연구에 있어 논리실증주의의 도입을 강조하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하였다.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ㄱ. 헌법재판소
-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ㄷ. 국민권익위원회
- ㄹ. 국가인권위원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VII 법령

출제영역 직업공무원제도

- ① (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을 의미하며, ㄱ - 헌법재판소, 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①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②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방식에는 이사회외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
- ③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집중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누가 기업지배의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로 구분된다.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이사회를 통한, 근로자 경영 참여, 공동결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종업원지주제도, 단기 업적주의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해당한다.

SUMMARY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구 분	주주 자본주의 모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기업의 본질	주주 주권주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	기업공동체주의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
경영목표	주주이익 극대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
경영상의 문제점과 원인	대리인 문제 주주의 통제력 부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반영 실패
기업규율 방식	이사회외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조직에 의한 통제, 주거려은행의 경영감시 및 통제, 이해관계자 경영 참여
기업성과 측정 방법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가격)	기업의 시장가치, 고용 관계, 공급자와 구매자와의 거래 관계 등
근로자 경영 참여	종업원지주제(ESOP), 연금펀드를 통한 지분 참여	이사회를 통한 근로자 경영 참여, 공동결정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제적 가치 추구, 단기 업적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전체 이익 추구, 장기적 성장 추구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주민의 참여

① 주민투표법 제1조

주민투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 x).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주민소송 제도는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송제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④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할 수 없다.

동법 제25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②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종업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인지를 강조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I 말 바꾸기
출제영역 동기부여이론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 뿐 아니라 욕구좌절로 인한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②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2요인이론)에서 종업원의 직무환경 요인은 위생요인이며, 직무성취감은 동기요인으로 동기부여에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인간의 공정성의 지각에 의해 동기유발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④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역할 인지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성과-만족이론이다.

올바른 지문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인지를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정부 간 관계-정부 간 갈등과 분쟁

①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단서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7항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퀴(Quinn)은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해 '내부지향-외부지향'과 '유연성-통제(안정성)'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 ㄷ. 레빈(Lewin)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unfreezing),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moving),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refreezing)하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I 말 바꾸기

출제영역 조직문화

- ㄱ ○ 퀴(Quinn)은 경쟁가치모형은 '내부지향(인간)-외부지향(조직)과 유연성(운동성, 변화), 통제(안정)'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적목표모형의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 ㄴ ✕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를 한 사회에 있어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권력거리가 강한(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집권화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 권력거리가 약한(크기가 작은) 문화가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 ㄷ ○ 레빈(Lewin)은 조직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해빙(unfreezing), 변화(moving, changing), 재동결(refreezing)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해빙	조직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
변화	예전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체
재동결	새롭게 형성된 행동이 정형화된 행동으로 굳어지는 과정

올바른 지문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작은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
- 평정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대상자 평가
-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 ② 가감점수법
- ③ 서열법
-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I 말 바꾸기

출제영역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직무수행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형태 등에 관한 평정요소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우열의 등급을 표시하는 평정척도를 그린 평정표를 통한 평정방법이다. 평정서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지만 연쇄화·집중화·관대화 등의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다.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 ②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③ 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 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I 말 바꾸기

출제영역 거시조직이론

- ①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적 인식론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론으로,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 ②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의 변화가 외부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환경결정론적 관점으로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③ 혼돈이론은 우리의 세계가 질서와 혼돈, 그리고 무질서의 세 가지 영역이 교호작용하는 과정하에 있다고 전제하고, 혼돈야기의 조건과 진행경로를 이해하고, 혼돈의 숨겨진 질서와 혼돈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는 전제하에, 조직구조는 상황적 특성(규모, 기술,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조직구조, 관리체계, 관리과정 등)과 상황적 특성이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조직이론이다.

SUMMARY 공공서비스의 유형(Savas)

환경인식 분석수준	결정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	임의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
개별조직	체제구조적 관점 ①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 관점 ① 전략적 선택이론 ②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 관점 ① 조직군생태학 이론 ② 조직경제학(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집단적 행동 관점 ① 공동체 생태학 이론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 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주인의 참여

-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기준타당성은 시험이 실제 시험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 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동법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법 제29조 【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x)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제1조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재산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개대상자는 1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
- ③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종합)

-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이다.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력지수**이다.
- ③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④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SUMMARY 지방재정력 평가모델

- (1) 재정규모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2) 지방자치 재정력 평가모형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액 한계 : 세출의 질 or 총재정규모 or 정부지원규모 등 실질적 재정상태를 알지 못함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보통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력지수	자치단체가 기초적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개념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이 넘으면 우수 10이하인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라는 일반재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충당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종합)

- ①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법 제35조

동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x)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x)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④ 국가재정법 제59조

동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책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 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 예측에서도 활용된다.
- ④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정책대안의 탐색

- ① 점증주의 방식이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에 해당한다.
- ②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 달라지면 동일한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른 나라의 정책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상황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주관적·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흔히 논의되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양자모두가 정책대안의 개발·창출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 ④ 브레인스토밍은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약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제 상황의 인식과 개념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올바른 지문

-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② 리플리(Ripley)와 플랭클린(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 ③ 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④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태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정책유형별 특징

- ①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 ② 보호적 규제정책은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으로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
- ③ 추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상징정책은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 증진을 위해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④ 로위(Lowi)의 정책분류는 분배·규제·재분배정책 이외의 속성을 보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속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지문

- ① 로위(Lowi)의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③ 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추출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④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베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19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비동질적집단 사후측정설계)은 선정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② 진실험은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정책평가(종합)

- ① 정책이 실시된 이후 두 집단을 선정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정효과로 인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② 진실험은 실험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모방, 정책내용의 유출 등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오염효과)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달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 배정을 통한 동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외적 타당도와 실험의 실행가능성이 높고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SUMMARY 실험과 비실험

		실험 & 통제집단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실행가능성
실험	진실험	동질성 확보 O (무작위 배정)	높음	낮음	낮음
	준실험	동질성 확보 X (짜짓기 배정)	중간	중간	중간
비실험		비교집단 X	낮음	높음	높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24 신용한 행정학 p.306~309

정답 ②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① 재평가는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 x)가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2항

동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평가는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x)가 실시한다.

동법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 x)이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